관계부처합동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1. 25.(수) 11:00 / (지면) 2026. 11. 26.(목) 조간 배포 2026. 11. 25.(수) 10:00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 합동 전수 조사 및 노동법 위반 의심 염전 근로 감독 실시

- 해수부, 지방정부, 경찰청,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염전 765개소 전수 조사
- 고용노동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40개소 염전 대상 근로 감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염전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 경찰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765개 모든 염전에 대해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점검했다.

전수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이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40개소 염전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염전 사업장 23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확인된 5개소에서 5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4천7백만 원을 즉시 청산하고, 시정에 불응하는 미청산 사업주(1명)**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하였다.

* 체불 사업주들은 노동자가 임금을 일시에 소비할 우려가 있어 노동자의 요청으로 임금을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감독 직후 노동자 계좌로 전액 지급 완료

** 형사입건 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임금 전액 청산 완료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조건 미명시(1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11개소) 등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한편, 염전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근절하고, 노동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정부 간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고용 실태 합동점검 및 법 위반 사항 처분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해당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내년부터는 소금 생산 초기부터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서 사업주 등 약 800명을 대상으로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27회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인식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염전 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염전을 포함한 수산업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 점검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인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구본찬 (051-773-6110)
		담당자	사무관	이성재 (051-773-6111)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553)
		담당자	서기관	박종길 (044-202-7528)
담당 부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김산호 (02-3150-2070)
		담당자	경 정	김상승 (02-3150-2770)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산유통가공과	책임자	과 장	손영곤 (061-286-6905)
		담당자	사무관	김홍기 (061-286-6980)